

문 5.(배점 2)

헌법상 군(軍)에 대한 민주적 통제의 확보 수단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대통령의 국군통수권 행사는 헌법과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하여 군통수에도 법치주의를 관철하고 있다.
- ㄴ.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원칙상 국방부장관에게 군사작전권인 군령권을 부여하고, 합동참모의장에게 군을 조직·유지·관리하는 양병권인 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 ㄷ. 국군의 조직과 편성은 법률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 ㄹ.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과 강화조약은 물론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영역 안에서의 주류에 대해서도 국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
- ㅁ. 군사에 관한 중요사항,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의 임명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고 있다.
- ㅂ. 국내 정치에 군을 동원할 목적으로 계엄선포권이 남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하여 대통령에게는 국회에 계엄선포를 통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국회에는 계엄승인권을 부여하고 있다.

- ① $\neg, \square$
② $\neg, \vee$
③ $\exists, \square$
④ $\neg, \exists, \vee$
⑤ $\neg, \sqsubset, \vee$

문 6.(배점 2)

다음 <사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사례>

대통령 甲은 국무총리 乙이 임명제청한 丙 대신에 丁을 국방부장관으로 임명하였다. 이후 여러 사안에서 丁과 의견대립을 해오던 乙은 丁이 부서한 차세대전투기도입안에 대해 부서를 거부하면서 甲에게 丁을 해임할 것을 건의하였으나, 甲은 乙의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채 국정운영상 긴급한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乙의 부서 없이 동안(同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게 하였다.

이에 乙이 甲의 丁에 대한 임명행위가 자신의 제청권한을 침해하여 당연히무효이고 丁에 대한 해임건의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탄핵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하여 관련 사안에 대해 자세히 보고하려 하자, 甲은 乙을 해임하였다.

- ㄱ. 乙의 丙에 대한 임명제청에 甲이 구속된다는 헌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다.
- ㄴ. 乙의 丁에 대한 해임건의에 甲은 법적으로 구속되지 않는다.
- ㄷ. 甲이 乙의 부서 없이 차세대전투기도입안에 서명하고 이를 시행하게 한 것은 적법하다.
- ㄹ. 乙은 국방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출석·답변할 수 있다.
- ㅁ. 甲은 국회의 동의 없이 乙을 해임할 수 있다.

- ① ㄱ, ㄴ, ㄷ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ㄹ, ㅁ
⑤ ㄷ, ㄹ, ㅁ

문 7.(배점 2)

우리 헌법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제헌헌법은 사기업 근로자의 이익분배규점권, 생활무능력자의 보호, 가족의 건강보호와 같은 사회적 기본권을 명시하였다.
- ㄴ. 1952년 헌법은 헌법개정에 필요한 의결정족수에 미달하여 부결되었는데 이를 반복하여 가결되었으며, 1954년 헌법은 헌법이 정하는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 ㄷ. 1960년 헌법은 대법원장과 대법관에 대해 선거를 통한 선출을 규정하였으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권과 더불어 헌법에 대한 최종적 해석권한을 부여하였다.
- ㄹ. 1962년 헌법은 국회의원의 입후보에 정당추천을 의무화하였지만, 임기 중 당적을 이탈하거나 변경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하였다.
- ㅁ. 1980년 헌법은 재외국민보호조항 및 정당운영자금의 국고보조조항을 두었고, 징계처분에 의한 법관의 파면을 배제하였다.
- ㅂ. 현행 헌법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긴급명령제도, 헌법재판소가 관할하는 대통령선거소송을 규정하였다.

- ① $\neg(O), \neg(x), \neg(x), \neg(O), \neg(O), \neg(x)$
- ② $\neg(O), \neg(x), \neg(O), \neg(x), \neg(O), \neg(x)$
- ③ $\neg(x), \neg(O), \neg(x), \neg(O), \neg(x), \neg(O)$
- ④ $\neg(O), \neg(x), \neg(x), \neg(x), \neg(O), \neg(x)$
- ⑤ $\neg(x), \neg(x), \neg(O), \neg(x), \neg(O), \neg(x)$

문 8.(배점 2)

영토 및 국민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제헌헌법에 따르면 영토의 변경을 위해서는 헌법개정이 필요하지만, 1954년 헌법은 국민투표에 의한 영토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
- ㄴ. 남북합의서는 한민족공동체 내부의 특수관계를 기초로 하여 합의된 것으로서 일종의 공동성명 내지 신사협정에 준하므로, 남북합의서의 채택 및 발효는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인정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ㄷ. 독도 등을 중간수역으로 정한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어업에 관한 협정」은 배타적 경제수역을 직접 규정한 것이 아니고, 독도의 영유권 문제나 영해 문제와는 직접적인 관련을 가지지 아니하므로 헌법상 영토조항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ㄹ. 「국적법」은 부모양계혈통주의에 기초한 속인주의를 원칙으로 하면서 속지주의를 보충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 ㅁ.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게 된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 대한민국 국민으로만 처우한다.

- ① ㄱ, ㄴ, ㅁ ② ㄱ, ㅋ, ㅁ
③ ㄴ, ㄷ, ㄹ ④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17.(배점 2)

기본권의 주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현행 헌법은 법인의 기본권향유능력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나 재산권과 같이 성질상 법인이 누릴 수 있는 기본권은 당연히 법인에게도 인정된다.
- ② 직장선택의 자유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는 만큼 단순히 국민의 권리가 아닌 인간의 권리로도 보아야 할 것이므로, 권리의 성질상 외국인도 제한적으로라도 직장선택의 자유를 향유할 수 있다.
- ③ 불법체류 중인 외국인은 다른 기본권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주거의 자유의 주체가 될 수는 없다.
- ④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기 위한 조직으로 성격상 권리능력 없는 단체에 속하지만, 구성원과 독립하여 그 자체로서 기본권의 주체가 될 수 있다.
- ⑤ 오늘날 생명공학 등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갖는 헌법적 가치질서로서의 성격을 고려할 때 인간으로 발전할 잠재성을 갖고 있는 초기배아에 대하여도 위와 같은 헌법적 가치가 소홀히 취급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국가의 보호의무가 인정된다.

문 18.(배점 3)

교육 및 양육의 권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모든 인간이 국적과 관계없이 누리는 양도할 수 없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헌법 제37조 제1항에서 나오는 중요한 기본권이다.
- ㄴ. 양육권은 공권력으로부터 자녀의 양육을 방해받지 않을 권리라는 점에서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자녀의 양육에 관하여 국가의 지원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는 점에서는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성격을 아울러 가지며, 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를 제한하는 것은 사회권적 기본권으로서의 양육권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ㄷ. 헌법이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성 및 행복추구권은 국가의 교육권한과 부모의 교육권의 범주 내에서 아동에게도 자신의 교육환경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와 자유롭게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부여한다.
- ㄹ. 교원의 신분이 공권력, 사립학교의 설립자 내지 기타 임면권자의 자의적인 처분에 좌우되는 경우에는 교육의 자주성·정치적 중립성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입법자가 법률로 정하여야 할 기본적인 사항에는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하는 최소한의 보호의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

ㄹ. 학교교육에 관한 한, 국가는 헌법 제31조에 의하여 부모의 교육권으로부터 원칙적으로 독립된 독자적인 교육권한을 부여받아 부모의 교육권과 함께 자녀의 교육을 담당하지만, 학교 밖의 교육영역에서는 원칙적으로 부모의 교육권이 우위를 차지한다.

- ① ㄱ, ㄷ
- ② ㄱ, ㄴ, ㄹ
- ③ ㄴ, ㄷ, ㄹ
- ④ ㄱ, ㄷ, ㄹ, ㄹ
- ⑤ ㄴ, ㄷ, ㄹ, ㄹ
- ⑥ ㄱ, ㄴ, ㄷ, ㄹ, ㄹ

문 19.(배점 2)

공무담임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공무담임권은 각종 선거에 입후보하여 당선될 수 있는 피선거권과 공직에 임명될 수 있는 공직취임권을 포함한다.
- ② 국회의원선거의 기탁금 제도 및 공무원 시험의 응시연령 제한은 모두 공무담임권의 제한 문제와 관련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 부단체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한 규정은 공무원 권한(직무)의 부당한 정지에 해당하여 공무담임권을 침해한다.
- ④ 재판연구원 및 검사의 신규임용에 있어 서류전형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에게만 필기전형이나 실무기록평가를 치르게 하는 것은 사법연수원 수료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없다.
- ⑤ 헌법 제7조에서 보장하는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본적 요소에 능력주의가 포함되는 점에 비추어 공무담임권은 모든 국민이 누구나 그 능력과 적성에 따라 공직에 취임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의 보장을 그 내용으로 한다.

문 20.(배점 2)

수용자의 기본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미결수용자가 민사재판, 행정재판, 헌법재판과 관련하여 변호사와 접견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
- ㄴ. 불구속 피의자나 피고인은 물론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수형자도 원칙적으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ㄷ. 미결수용자의 변호인 접견권 역시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될 수 있다.
- ㄹ. 출정비용을 예납하지 않았거나 영치금과의 상계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수형자의 행정소송 변론기일에 수형자를 출정시키지 아니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 ㅁ. 징벌대상자로서 조사를 받고 있는 수형자가 변호인 아닌 자와 접견할 때 교도관이 참여하여 대화내용을 기록하게 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수형자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ㄹ
- ④ ㄴ, ㅁ
- ⑤ ㄷ, ㄹ
- ⑥ ㄱ, ㄴ, ㅁ

문 29.(배점 3)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 ㄱ.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모든 하급심을 기속한다.
 ㄴ. 법원이 중대한 신체상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대법관인 경우에는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령이 퇴직을 명할 수 있고, 판사인 경우에는 법관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퇴직을 명할 수 있다.
 ㄷ. 대법관회의는 대법관 전원의 과반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ㄹ. 법원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직, 강등, 감봉, 견책의 4종류이다.
 ㅁ. 대법관회의의 의결에서 대법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可否同數)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ㅂ. 대법원은 규칙제정권과 예산안 편성권을 가진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② ㄱ(×), ㄴ(×), ㄷ(×), ㄹ(×), ㅁ(○), ㅂ(×)
 ③ ㄱ(×), ㄴ(×), ㄷ(×), ㄹ(○), ㅁ(○), ㅂ(○)
 ④ ㄱ(○), ㄴ(○), ㄷ(○), ㄹ(×), ㅁ(○), ㅂ(×)
 ⑤ ㄱ(○), ㄴ(○), ㄷ(○), ㄹ(○), ㅁ(×), ㅂ(×)

문 30.(배점 3)

헌법소원심판의 보충성 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다른 법률에 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를 직접 대상으로 하여 그 효력을 다룰 수 있는 권리구제절차가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ㄴ. 먼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고 나서 종국결정 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사전에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은 흠결이 치유될 수 있다.
 ㄷ.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에 대한 불복수단으로 어떠한 구제절차도 마련해 놓고 있지 않고, 법원의 확립된 판례에 의하여 그 행정처분성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충족한다.
 ㄹ.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그 소송을 취하하였거나 취하간주된 경우 그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다른 법률에 의한 적법한 구제절차를 거쳤다고 볼 수 없다.
 ㅁ. 사법경찰관이 청구인의 범죄전력과 피의사실, 범행방법, 증거의 내용 등이 기재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행위가 「형법」 제126조의 피의사실공표죄에 해당하면, 청구인은 이를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그 처리결과에 따라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를 거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위와 같은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보도자료 배포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보충성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 ① ㄱ(○), ㄴ(○), ㄷ(×), ㄹ(×), ㅁ(○)
 ② ㄱ(○), ㄴ(○), ㄷ(○), ㄹ(○), ㅁ(○)
 ③ ㄱ(×), ㄴ(×),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1.(배점 4)

평등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근로계약에 별도의 정함이 없는 이상,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와 그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계약의 계속성에 대한 기대에 본질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해고예고제도를 적용할 때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월급근로자를 그 이상 근무한 월급근로자와 달리 취급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ㄴ. 산업연수생이 연수라는 명목하에 사업주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고 수당 명목의 금품을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 근로관계에 있는 경우에도, 외국인 산업연수생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이 보장한 근로기준 중 주요 사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한 것은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한다.
 ㄷ. 디엔에이감식시료 채취대상범죄로 징역이나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자 중에서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당시에 수용 중인 자에 대하여만 위 법률을 소급적용하도록 하는 부칙조항은 위 법률 시행 당시 수용 중인 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
 ㄹ. 주민투표권은 헌법상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의 권리에 해당하므로, 주민투표권에 관하여 비교집단 상호간에 차별이 존재하더라도 헌법상의 평등권은 문제되지 아니한다.
 ㅁ. 등기부상 소유자와 점유자 상호간, 부동산을 스스로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소유자 상호간은 각각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비교대상이 되는 집단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한 「민법」 조항은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ㅂ. 식품, 먹는 샘물 등의 먹는 물 또는 주류는 「약사법」 조항이 규율하는 대상인 의약품과 동일한 성질의 물품이라 할 수 없으므로 주류 등을 매매하는 식품판매업자는 평등원칙을 심사함에 있어 의약품 도매상과 비교집단이 될 수 없다.
 ㅅ. 공인중개사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등록관청으로 하여금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필요적으로 취소하도록 하는 것은 다른 직종에 비해 과도한 제한이라 볼 수 없으므로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문 35.(배점 4)

재산권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상 퇴직급여 및 퇴직수당을 받을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의 하나인 사회보장수급권에는 해당하지만,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ㄴ. 개인택시면허의 재산권적 성격은 인정되지만, 개인택시의 공급과잉을 억제하기 위해 개인택시면허의 양도를 금지하는 것은 개인택시운수업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 ㄷ.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인정받기 위한 요건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분할하여 신고할 것을 요구하면서 위 기한이 경과하면 일률적으로 배우자의 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있는 조항은 배우자인 상속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 ㄹ.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위로금 등의 각종 지원은 태평양전쟁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일제에 의한 강제동원희생자와 그 유족이 입은 고통을 치유하기 위한 시혜적 조치이며, 이러한 시혜적 급부를 받을 권리 역시 헌법 제23조에 의하여 보장되는 재산권에 해당한다.
- ㅁ. 학교안전공제회가 관리·운영하는 학교안전공제및사고예방기금은 헌법 제23조 제1항에 의하여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볼 수 없다.
- ㅂ. 소유자가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경작하지 아니하는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60%의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한 것은 재산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 ㅅ. 행정기관이 개발촉진지구 지역개발사업으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 이를 고시하면 고급골프장 사업과 같이 공익성이 낮은 사업에 대해서까지도 시행자인 민간개발자에게 수용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은 헌법 제23조 제3항에 위반된다.

- ①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②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③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④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⑤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⑥ ㄱ(×), ㄴ(○), ㄷ(○), ㄹ(○), ㅁ(×), ㅂ(○), ㅅ(○)
 ⑦ ㄱ(×), ㄴ(×), ㄷ(×), ㄹ(×), ㅁ(○), ㅂ(○), ㅅ(○)

문 36.(배점 2)

표현의 자유 및 통신의 자유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수용자가 내보내려는 모든 서신을 봉합하지 않은 상태로 교정시설에 제출하도록 한 규정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 수용자의 교화 및 사회복귀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것이므로 수용자의 통신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ㄴ. 사전심의를 받지 아니한 의료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상의 규정은 사전검열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 ㄷ.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을 허가함에 있어 총연장기간 또는 총연장횟수의 제한을 두지 아니한 구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 제7항 단서 중 전기통신에 관한 ‘통신제한조치기간의 연장’ 부분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한다.
- ㄹ. 금치처분을 받은 미결수용자에 대하여 그 기간 중 집필을 금지하면서 예외적인 경우에만 교도소장이 집필을 허가할 수 있도록 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상의 규정은 미결수용자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
- ㅁ. 긴급조치 제1호는 유신헌법을 부정하거나 반대하고 폐지를 주장하는 행위 중 실제로 국가의 안전보장과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심각하고 중대한 위협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경우 이외에도, 국가긴급권의 발동이 필요한 상황과는 전혀 무관하게 헌법과 관련하여 자신의 견해를 단순하게 표명하는 행위까지 모두 처벌하고 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없으므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ㄷ, ㅁ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ㅁ

문 37.(배점 3)

헌법소원심판의 적법요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공권력 행사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당해 공권력 행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기본권 침해의 자기관련성이 인정된다.
- ㄴ. 공권력 행사가 헌법전문에 기재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는 부분에 위반된다는 것만으로는 일반 국민의 법적 지위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기본권 침해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ㄷ. 교원의 노동조합은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요구에 따라 30일 이내에 스스로 위법 사유를 시정하지 않으면 법외노조통보를 받게 되는데,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는 별도의 불복절차가 존재하는지가 불분명하므로 위 시정요구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더라도 보충성 요건은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 ㄹ. 고소하지 아니한 피해자가 그 피의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나 검사의 처분을 다투기 위한 별도의 고소와 그 결과에 따른 권리구제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기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을 곧바로 청구할 수 있다.
- ㅁ.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하여 영업시간 제한을 명하거나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의무휴업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은 법률조항 자체에서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자의 기본권을 직접 제한하고 있으므로 직접성 요건을 충족한다.

- ① ㅁ ②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ㄱ, ㄷ, ㅁ
 ⑤ ㄱ, ㄷ, ㅁ

문 38.(배점 3)

국회의 국정감사·조사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 ㄱ. 제헌헌법은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규정하였으나, 1972년 헌법은 국정감사권을 폐지하였고, 1980년 헌법은 국정조사권을 명문으로 규정하였다.
- ㄴ. 국회에서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누구든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 ㄷ.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할 것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나, 자신이 공소제기를 당하거나 유죄판결을 받을 사실이 발로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 ㄹ. 본회의는 의결로써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나 이를 단축할 수 없고, 조사계획서에 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그 활동기간은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가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로 한다.
- ㅁ.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로 하여금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하여 조사를 시행하게 하는바, 이 경우 국정조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는 교섭단체의원 수의 비율에 따라 구성하여야 하나 조사에 참여하기를 거부하는 교섭단체의 의원은 제외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ㄹ, ㅁ
③ ㄷ, ㄹ, ㅁ
④ ㄱ, ㄴ, ㄷ, ㅁ
⑤ ㄱ, ㄴ, ㄷ, ㄹ, ㅁ

문 39.(배점 3)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① 당해사건의 제1심 계속 중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을 제기한 청구인이 당해사건의 항소심에서 항소를 취하하여 청구인에 대한 패소의 원심판결이 확정된 경우, 당해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이 위헌으로 결정되면 확정된 원심판결에 대한 재심절차를 통하여 원심판결의 주문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② 양벌규정에 면책조항을 추가하는 형식으로 법률이 개정되었으나 개정법 시행 전의 범죄행위에 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는 취지의 경과규정을 두지 아니한 경우, 개정 전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된다.
- ③ 청구인이 당해사건인 형사재판에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처벌조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재판의 전제성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 및 관련 당사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될 수 있다.

- ④ 당해사건에서 헌법소원심판의 심판대상조항이 아닌 법률에 규정된 소송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소 각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⑤ 재판의 전제성에서 말하는 ‘재판’이란 원칙적으로 본안에 관한 재판인지 소송절차에 관한 재판인지를 불문하며, 중국재판뿐 아니라 중간재판도 이에 포함된다.

문 40.(배점 3)

권한쟁의심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 ㄱ. 국가기관의 행위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해 그 국가기관에게 부여된 독자적인 권능을 행사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비록 국가기관의 행위가 제한을 받더라도 권한쟁의심판에서 말하는 권한이 침해될 가능성은 없다.
- ㄴ. 피청구인의 장래처분이 확실하게 예정되어 있고 그로 인해 청구인의 권한이 침해될 위험성이 있어 청구인의 권한을 사전에 보호할 필요성이 매우 큰 예외적인 경우에는 장래처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청구도 허용될 수 있다.
- ㄷ. 헌법 제111조 제1항 제4호에서 말하는 국가기관의 의미와 권한쟁의심판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국가기관의 범위는 헌법해석을 통하여 확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 ㄹ.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은 주민, 자치권과 함께 자치단체의 구성요소이고 자치권이 미치는 관할구역의 범위에는 육지는 물론 바다도 포함되므로, 공유수면의 관할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분쟁이 있는 경우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 ㅁ. 지방자치단체인 청구인이 자신의 비용으로 기관위임사무인 안전시설공사를 하였는데 이후 국가가 이에 대한 예산배정요청을 거부한 경우, 공법상의 비용상환청구소송 등과는 별개로 자치재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권한쟁의심판청구가 허용될 수 있다.

- ① ㄱ, ㄷ
② ㄴ, ㅁ
③ ㄱ, ㄴ, ㄹ
④ ㄷ, ㄹ, ㅁ
⑤ ㄱ, ㄴ, ㄷ, ㄹ
⑥ ㄱ, ㄴ, ㄷ, ㄹ, ㅁ

이하부터는 여백입니다